



즉시 사용

비고	* 국무총리 모두말씀 회의직후 별도배포 # 공동배포 : 행정안전부, 농림축산식품부		
담당	<총괄>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		과장 서영석, 서기관 조상언 (044-200-2056, 2057)
	공공데이터 표준화	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실	과장 하종목, 서기관 김부선 (044-200-2082, 2083)
		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	과장 배일권, 사무관 박종훈 (02-2100-3450, 4078)
	AI·구제역 방역평가	국무조정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실	과장 김신재, 사무관 김동현 (044-200-2231, 2232)
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		과장 이정삼, 서기관 김희중 (044-201-2511, 2515)	

수요자 중심 정책으로 공공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겠습니다.

<공공데이터 표준화 및 활용 확대방안>

- ▶ 공공데이터 용어·형식 표준화, 정확성·현행화 제고를 통해 데이터 품질 향상
- ▶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개방 원스톱 서비스 제공
- ▶ 공공데이터 전수조사 및 개방 확대, 인공지능데이터·공간위치데이터 적극 발굴

<AI·구제역 방역평가 및 개선방향>

- ▶ 위기단계 하향(심각→주의)하되, 5월말까지 특별방역 계속
- ▶ 선제적·과감한 차단방역 주효, 예방적 살처분 참여유도 등 개선방안 마련('18.6)

□ 이낙연 국무총리는 4월 26일(목) 오전,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(약칭: '현안조정회의')를 주재했습니다.

○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「공공데이터 표준화 및 활용 확대방안」 과 「AI·구제역 방역평가 및 개선방향」 을 심의·확정했습니다.

* 참석 : 총리(주재), 기재부·교육부·과기부·국방부·행안부·문체부·농식품부·산업부·복지부·고용부·국토부 장·차관, 국조실장, 식약처장, 통계청장 등

◆ 공공데이터 표준화 및 활용 확대방안 (행정안전부)

□ 공공데이터의 개방*은 확대되었으나 국민과 기업의 체감 수준**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으로, 정부는 민간에서 공공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.

* 개방(누적) : ⁽¹³⁾5,272개 → ⁽¹⁶⁾21,358개 → ⁽¹⁷⁾24,588개 ('13년 대비 +19,316개)

활용(누적) : ⁽¹³⁾13,923건 → ⁽¹⁶⁾1,884,250건 → ⁽¹⁷⁾3,871,984건 ('13년 대비 +386만건)

** 활용시 애로사항('17.10~12월, 활용기업 640개사, 복수선택) : 현행화 미흡(46.7%) > 표준화 부족(46.3%) > 낮은 정확성(38.8%) > 양 부족(29.4%)

□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① 국가안보·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제외하고 개방을 확대하겠습니다.

- 모든 기관(약 690개 기관)이 보유한 공공데이터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데이터의 정확한 소재 및 현황을 파악한 후 개방을 확대하겠습니다.

- 특히, 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공지능데이터·공간위치데이터*와 안전·환경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데이터**를 적극 발굴·개방하겠습니다.

* 자율주행영상판독정보, 스마트시티교통정보, 인공지능의료영상판독정보 등 개방('18)

** 도로·터널·하천 등 공공시설물 안전정보, 먹는샘물 수질정보 등 개방('18)

② 공공데이터의 용어·형식을 표준화 하고, 정확성·현행화를 높여 데이터의 품질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

- 모든 기관에서 보유한 공공데이터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분석한 후 '데이터 표준용어'를 마련하여 순차적 전환(~'22)을 추진하는 한편, 동일 형식으로 개방토록 하여 민간의 가공부담을 해소하겠습니다.

- 또한, 공공데이터의 정확성·현행화 여부를 주기적(월 1회) 점검하고, 기계 판독이 가능하도록 오픈포맷* 비중을 지속 확대하겠습니다.

* 특정 소프트웨어(한글·엑셀 등)에 종속되지 않고 다양한 소프트웨어에서 자유롭게 활용(수정·편집) 할 수 있는 형태의 데이터

③ 정부 기관이 보유한 모든 데이터를 공공데이터포털(data.go.kr)에서 원스톱으로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- 국가데이터맵을 구축하여 정부가 보유한 데이터 목록을 공개하고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기관별 데이터 포털을 통합·연계하여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('18.12)하겠습니다.

□ 정부는 이번 대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(위원장 : 총리·민간위원 공동)와 연계하여 민·관 합동으로 '공공데이터·통계 표준화 협의체'를 구성하고, 「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을 제정('17.12 국회제출)하는 한편, 중앙부처·지자체별 데이터 전담인력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.

◆ AI·구제역 방역평가 및 개선방향 (농림축산식품부)

□ 정부는 작년 11월 17일부터 4개월 간 AI와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해 지자체와 매일 상황점검을 하고, 과감한 방역조치를 해 왔습니다. 그 결과 AI 발생은 전년 동기 대비 5.7% 수준으로 줄었고, 구제역 발생도 감소했습니다.

* (AI) ('16.11~'17.4) 383 → ('17.11~'18.4) 22건, (구제역) ('16) 21 → ('17) 9 → ('18.4) 2건

○ 정부는 4월 26일(AI)과 30일(구제역)을 기해 전국 방역대를 모두 해제*하고 위기 단계도 하향 조정(심각 → 주의)할 예정이나, 이후에도 특별방역기간 종료(5월말)까지 주요지역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겠습니다.

* (AI) 40일째 비발생, (구제역) 전국 백신접종 완료, 25일째 비발생

□ 오늘 회의에서는 그 동안의 방역 조치사항을 점검하고, 방역의 성공적 요인과 향후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중점 논의했습니다.

○ 농식품부·환경부·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선제적이고 과감한 방역조치가 주요했던 것으로 평가됐습니다.

【잘된 점】

- (AI) △확진 전 간이검사 결과 및 방역관 임상소견 확인 즉시 살처분 → 바이러스 외부 전파차단 △동절기 오리 휴지기제 도입 → 확산 제어효과 △철새정보 공유, 이동통제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유기적 대응
- (구제역) △신속한 긴급백신 접종 → 확산 차단 △농가의 신속한 신고와 강화된 방역 조치 → 효율적 방역 가능 △일제소독 등 민관협력 노력

○ 다만, AI 발생농장 3km내 예방적 살처분 지연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, 새로운 유형의 구제역 발생으로 상시백신 변경(돼지 O형 → O+A형) 등을 검토·보완하기로 했습니다.

【보완 필요사항】

- (AI) △3km내 예방적 살처분 일부 거부·지연 → 일괄적용 원칙, 제재 강화 필요 △오리 휴지기제 적용 혼선 → 보상기준 등 전국 공통 실시기준 마련
- (구제역) △혈청형 판별 후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 → 간이키트 양성시 발생 시·군 발령, 혈청형 확인 후 전국 확대 △돼지 백신 미접종 유형(A형) 발생 → A형 포함 상시백신 변경

□ 향후, 정부는 전문가 평가와 추가 보완사항을 발굴한 후 6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.

《붙임》 『공공데이터 표준화 및 활용 확대방안』 요약

I 현황 및 문제점

□ 그간 공공데이터 정책 성과 및 반성

- 공공데이터법 시행('13.10) 이후 단기간에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OECD 등 국제사회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국민·기업이 체감하는 수준은 낮음
 - * 공공데이터 개방누적 : ⁽¹³⁾ 5,272개 ⁽¹⁷⁾ 24,588개 / 데이터 활용 앱·웹 서비스누적 : ⁽¹³⁾ 42개 ⁽¹⁷⁾ 1,421개
 - ** OECD 공공데이터 개방지수 2회 연속('15, '17) 세계 1위
- 국민과 기업들은 실제 필요한 공공데이터가 개방되어 있지 않고, 공공데이터 표준화 미흡 및 낮은 품질수준으로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어려움 호소
 - * 기업들은 공공데이터의 활용 시 애로사항으로 데이터 '현행화 및 표준화 부족', '낮은 정확성', '양 부족' 등을 지적 (공공데이터 활용 기업 1,511개社 대상 실태조사 결과 / '17.10~12)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(개방) 한국 공공데이터 개방은 아직까지 미국·영국 등에 비해 양적으로도 부족한 수준이며, 특히 4차 산업혁명 관련 데이터 발굴 및 개방이 시급한 상황
 - * 인공지능/공간·위치데이터 : 한국 8,448개(34.4%) ↔ 미국 158,836개(69.5%), 영국 24,544개(56.5%)
- (표준) 공공데이터 생성 시 용어·형식 등에 대한 표준화가 부족하고, 현행화·정확성이 미흡하여 데이터의 불일치 및 중복·누락 발생
 - * (용어) '기업명' 관리용어가 부처별 '법인명(국세청)', '업체명(관세청)', '상호명(조달청)'으로 불일치
 - ** (형태) HWP, PDF 등 활용하기 어려운 형태로 공개되어 데이터 변환 필요, 변환 시 오류 발생
- (창구) 공공데이터포털('13.10) 외 개별기관 자체 데이터포털이 난립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어디에서 요청해야 하는지 창구를 찾지 못하는 문제 발생
 - * 개별기관 자체 데이터포털 구축 현황 : 총 101개(중앙부처 : 62개, 지자체 : 39개)

II 공공데이터 표준화 및 활용 확대방안

1. 공공데이터 전수 조사 및 개방 확대 추진

① 공공데이터 전수 조사 추진

- (전수조사) 범정부 차원에서 모든 기관(중앙·지자체·공공기관 698개 기관)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의 정확한 소재 및 현황 파악
- (활용계획) 비공개 공공데이터 개방, 데이터 표준화 기초자료 활용

▶ (일정) 시범조사(4~5월) → 주요기관 현장조사(5~7월) → 보유데이터 확정(8월)

②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추진

- (개방 확대)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비공개되고 있는 공공데이터 대상 재검토를 거쳐 국가안보·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데이터를 제외하고 개방 확대
- (신산업 데이터) 인공지능데이터·공간위치데이터 등 발굴·개방 확대

* '18년 개방 예정 주요 데이터: 자율주행영상판독정보, 스마트시티교통정보, 인공지능의료영상판독정보 등

▶ (일정) 비공개 공공데이터 재검토('18.下~), 신산업 데이터 발굴 및 개방 확대(연중)

2. 범정부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강화(표준화 및 현행화)

① 범정부 공공데이터 용어·형식 표준화

- (표준화) 공공데이터의 용어·형식을 분석하여 범정부 데이터 표준화 추진
 - (용어) 행정표준용어·통계표준용어 등을 포괄하는 「범정부 데이터 표준용어」 마련
 - * (예시) 기업 항목: 사업체·사업자·기업체·업체 등의 사용용어를 “사업체” 표준용어로 정의
 - (형식) 범정부 데이터 표준용어별 형식과 허용되는 값의 규칙 정의
 - * (예시) 길이(Km, 자리수), 위치(위·경도 좌표값), 날짜(년, 월, 일), 시간(시:분:초) 등

- (표준적용) 「공공데이터 표준화 변환 로드맵」을 수립하여 '22년까지 민간 활용도 및 표준 적용 용이성에 따라 체계적·순차적 변환 추진
 - * 민간 활용도가 높고 표준 적용이 용이한 데이터 조기 정비('18.下~), 활용도는 높으나 표준 적용이 어려운 데이터 순차 정비('19.上~)

- (개방표준) 공공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 수요가 많은 다수 기관 공통 보유 데이터 개방표준 지정을 확대하여 민간의 가공부담 해소
 - * 개방표준: 공공데이터 개방 시 공통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개방기준(용어·형식 등), 공공데이터 개방표준(누적): ⁽¹⁷⁾ 109개 ⁽¹⁸⁾ 120개 → ⁽¹⁹⁾ 140개 → ⁽²⁰⁾ 160개 → ⁽²¹⁾ 180개 → ⁽²²⁾ 200개

▶ (일정) 범정부 데이터 표준용어 마련('19.1월), 공공데이터 표준화 변환 로드맵 수립 (~'18.12월), 신규 개방표준 제정 및 적용·보급 확대(~'18.12월)

② 공공데이터 정확성·현행화 등 품질 강화

- (정확성·현행화) 공공데이터포털(data.go.kr) 등록 데이터 대상 정확성·현행화 등 주기적(월 1회) 점검 * 데이터 오류, 데이터 갱신주기, 실시간 데이터 전송속도 등

- (데이터 형태) 기계 판독이 가능하도록 개방 공공데이터의 개방포맷* (3단계) 비중을 지속 확대하여 민간의 데이터 활용도 제고

* 개방포맷: 특정 소프트웨어(한글·엑셀 등에 종속되지 않고 다양한 소프트웨어에서 자유롭게 활용(수정·편집) 할 수 있는 형태의 데이터 / 개방포맷(3단계 이상) 비율: ⁽¹⁶⁾ 69.4% → ⁽¹⁷⁾ 78.8% → ⁽¹⁸⁾ 85%

- (평가) 공공데이터 표준화, 현행화 및 정확성 확보 등 품질관리 쉐 영역에 대한 '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시행'을 통해 범정부 차원 품질관리 이행력 확보

* 품질관리 수준평가제 확대: ⁽¹⁸⁾ 중앙행정기관 → ⁽¹⁹⁾ 지방자치단체 → ^(20~) 공공기관

▶ (일정) 정확성·현행화 주기적 점검, 개방포맷 비중 및 오픈API 방식 데이터 제공 확대(~12월)

3. 공공데이터 개방 원스톱(One-stop) 창구 구축

◇ 공공데이터포털(data.go.kr)에 접속하면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고, 데이터를 간편하게 요청할 수 있는 창구 구축

1. 범정부 보유 공공데이터 목록 공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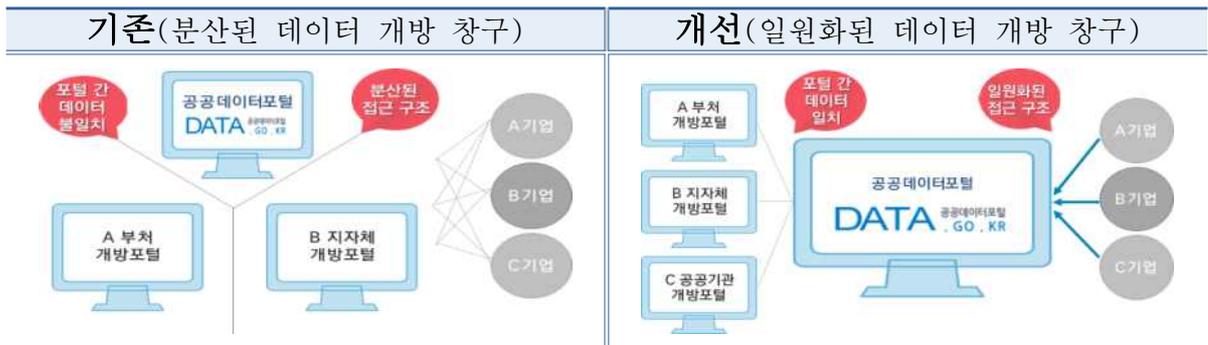
○ (데이터 목록 공개) 정부 보유 데이터 현황을 보여주는 '국가데이터맵'을 구축하여 데이터 목록을 공개하고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구현

	기존	개선
(목록공개)	√ 일부 개방 데이터 목록 공개	√ 모든 기관 보유 데이터 목록 공개
(검색가능)	√ 데이터 목록 검색 불편(단순 키워드 검색)	√ 데이터 목록 검색 용이(연관 키워드 검색)
(제공방식)	√ 연관관계를 나열식으로 제공	√ 연관관계를 도식화하여 제공

▶ (일정) 국가데이터맵 시스템 설계(5~8월) → 구축(9~12월) → 시범운영('19.1월)

2. 공공데이터 개방 창구 일원화

○ (데이터 창구) 개별 기관별로 구축·운영되고 있는 데이터포털을 범정부 공공데이터포털(data.go.kr)로 통합·연계 * 운영 필요성이 낮은 개별 데이터포털 통폐합 등 정비
- (통합제공) 범정부 차원에서 수집·관리된 모든 데이터를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하여 통합된 형태로 쉽게 제공



▶ (일정) 개별기관 데이터포털 정비계획 수립(~5월) → 통합 정비 추진(~12월)

4. 공공데이터 표준화 및 활용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

◇ (법령) 범정부 데이터의 체계적인 통합관리, 기관 간 데이터 연계 및 공동 활용을 위한 「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정 추진('17.12월 국회 제출)

◇ (인력·예산) 중앙·지자체 대상 공공데이터 전담인력 현황 및 수요조사(4월 중)를 거쳐 범정부 공공데이터 인력 확충, 품질관리 예산 비중 확대

* 공직분류체계 내 데이터 직류 신설 및 공공분야 데이터 전문가 양성 교육 강화

◇ (조직) 공공데이터 표준화·품질관리 지원을 위한 전문 지원기관 설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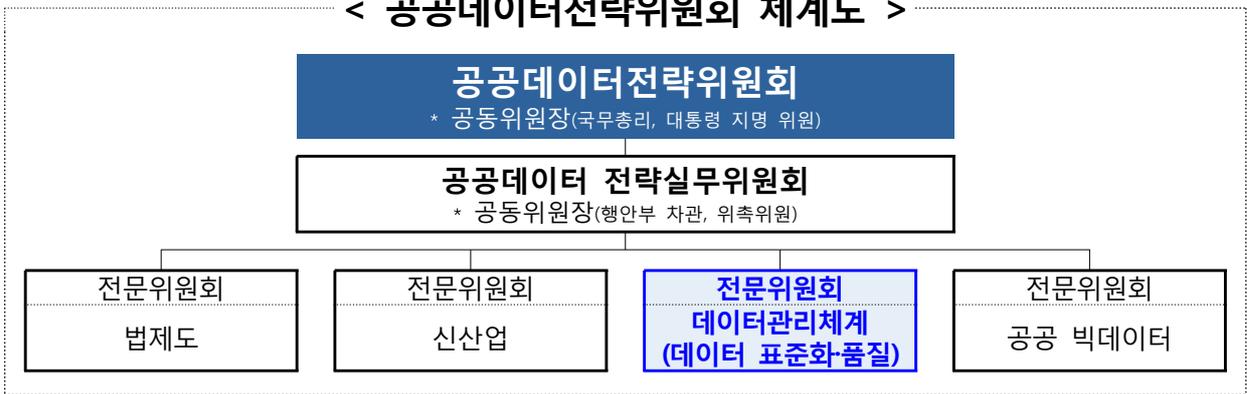
* 한국정보화진흥원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기능 및 인력 보강

□ **범정부 차원의 공공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 추진**

○ (컨트론타워)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*가 공공데이터 표준화에 대한 일관된 방향 제시로 범정부적 데이터 표준화 추진

- * 공공데이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·조정하고 추진사항을 점검·평가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(공공데이터법 제5조) / 공동위원장(2명) : 국무총리·민간위원
-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산하 데이터관리체계 전문위원회 기능에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 기능 강화('18.上)

<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체계도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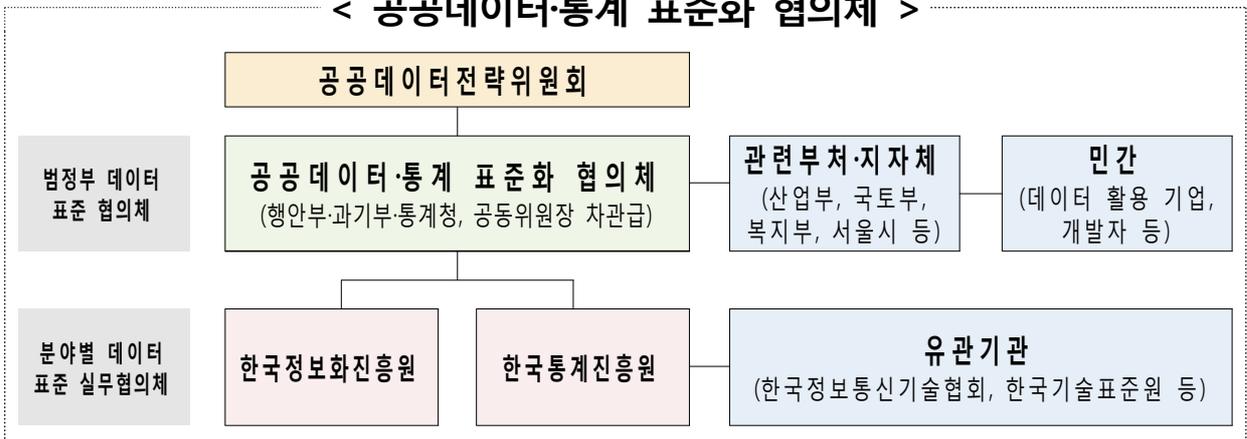


□ **공공데이터·통계 표준화 협의체 신규 구성**

○ (공공·민간) 공공데이터·통계 표준화 및 민간데이터와의 융·복합 추진을 위해 '공공데이터·통계 표준화 협의체*' 구성('18.下)

- * 행안부·과기부·통계청(표준화 공동 총괄), 산업부·국토부·복지부 등 관련부처·지자체(표준화 대상 발굴 및 적용), 한국정보화진흥원(데이터 표준 개발 및 관리), 민간(공공데이터 표준 수요 제기)
- 민간 활용도가 높으나 부처별로 상이한 용어·형식으로 관리되고 있는 공공데이터·통계 대상 표준화 순차적 추진('18.下~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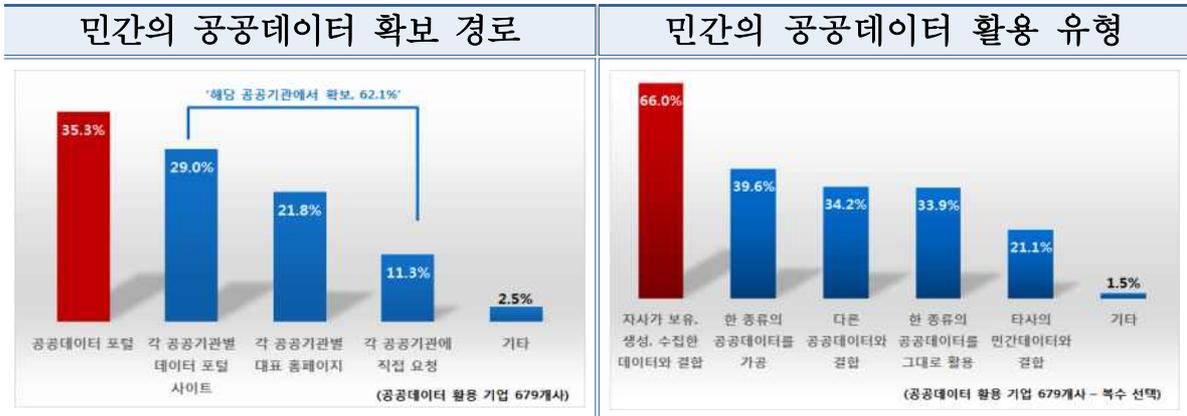
< 공공데이터·통계 표준화 협의체 >



- ◇ (조사대상) 공공데이터 활용 핵심기업(679개社) 및 일반기업(832개社) 총 1,511개社
- * 핵심기업 : 공공데이터 활용 기업, 일반기업 : 공공데이터 활용 가능성이 있는 잠재기업 / 조사기간 : '17.10월 ~ 12월
- ◇ (조사내용) 공공데이터 활용 실태와 성과, 공공데이터 정책에 대한 수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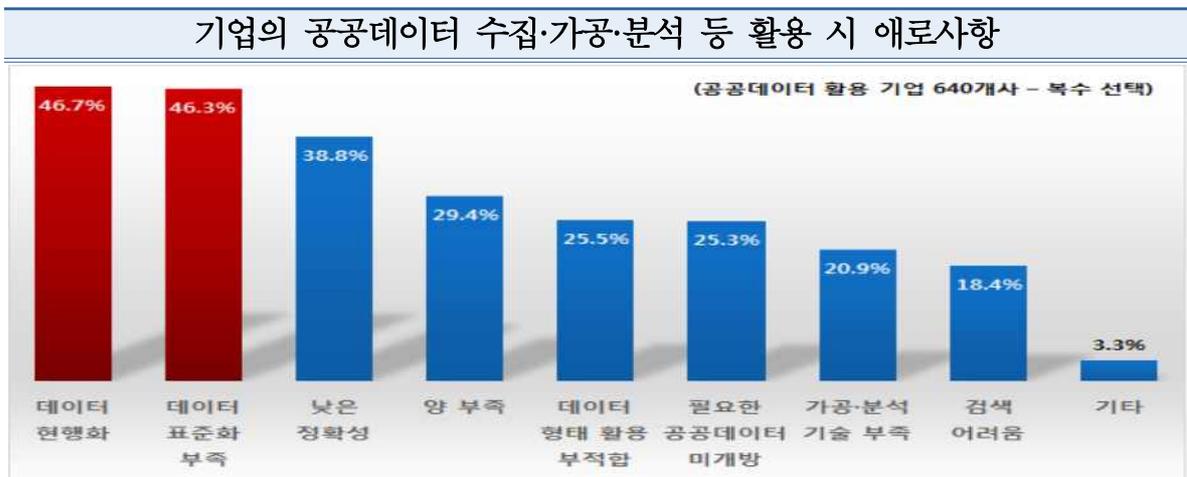
□ 공공데이터 수집 경로 및 활용 유형

- (수집) 공공데이터는 주로 공공데이터포털(data.go.kr)을 통해 확보(35.3%)하고 있으나, 개별기관 데이터포털 등을 통해 확보(62.1%)하는 경우가 더 높음
- (활용) 확보된 공공데이터를 민간데이터와 결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형(66%)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



□ 공공데이터 활용 시 애로사항

- 공공데이터 활용 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데이터 현행화(46.7%) 및 표준화 부족(46.3%) 지적, 낮은 정확성(38.8%), 양 부족(29.4%) 등도 호소



붙임3

선진국들과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 비교

□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공공데이터의 양적 부족

- (개방) 공공데이터법 시행('13.10.) 이후 공공데이터 개방*은 단기간에 4.7배 증가하였으나, 아직까지 영국의 56.6%, 프랑스의 73.8% 수준

* 개방(누적) : ⁽¹³⁾ 5,272개 ⇨ ⁽¹⁷⁾ 24,588개 / OECD 공공데이터 개방 2회 연속('15, '17) 세계 1위

구 분	한 국	영 국	프 랑 스
개 방 공공데이터	24,588개	43,471개	33,306개

※ 국가별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되어 있는 데이터셋 개수 기준('17년, 한국정보화진흥원 조사)

- 특히, 4차 산업혁명 관련 데이터 발굴 및 개방은 보다 시급한 상황

구 분	한 국 (전체 24,588개)	미 국 (전체 228,387개)	영 국 (전체 43,471개)
인공지능 데이터	68개(0.3%)	9,447개(4.1%)	278개(0.7%)
공간·위치 데이터	8,380개(34.1%)	149,389개(65.4%)	24,266개(55.8%)

※ 국가별 공공데이터포털의 데이터 포맷분류별 개수를 합산하여 산정('17년, 한국정보화진흥원 조사)

붙임4

공공데이터 표준화 미흡 사례 예시

□ 범정부 차원의 통일된 공공데이터 표준 미흡

- (표준) 민간 활용도 높은 공공데이터에 대한 개방표준*을 마련하여 확대 중이나, 데이터 생성 시 용어·형식 등에 대한 표준화는 부족

* 개방표준 : 공공데이터 개방 시 공통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개방기준(용어·형식 등), (예시) 주차장정보, 공중화장실정보, CCTV정보, 개별공시지가정보, 신호등정보 등

** 공공데이터 개방표준(누적) : ⁽¹⁴⁾ 11개 → ⁽¹⁵⁾ 43개 → ⁽¹⁶⁾ 79개 → ⁽¹⁷⁾ 109개 ('14년 대비 +98개)

< 데이터 용어·형식 등 불일치 사례 >

◆ 동일 데이터에 대한 관리 '용어'가 다른 경우

구 분	기업정보 관련 관리용어
국세청	법인등록번호, 법인명 , 대표자 , 대표자주민번호, 사업장소재지 등
관세청	법인등록번호, 업체명 , 대표자성명 , 주민등록번호, 대표자주소 등
조달청	사업자등록번호, 상호명 , 대표자성명 , 주민등록번호, 우편번호 , 주소 등

◆ 동일 데이터에 대한 관리 '형식'이 다른 경우

구 분	날짜·시간정보 관련 관리형식
A부처	날짜 (DD-MM-YYYY, 04-18-2018), 시간 (HH24:MI, 14:30)
B부처	날짜 (YYYY.MM.DD, 2018.04.18), 시간 (AM/PM HH12:MI, PM 02:30)